**북한위기관리의 해법**

**- 한반도 통일과 한중협력 방향-**

**이 창형(李昌衡) 국방연구원 중국담당 선임위원**

Ⅰ. 문제 제기: 한국의 안보 구도와 북한 요인

❍ 한국의 안보구도는 한국 내 보수와 진보세력 간의 갈등구조와 한반도 내의 남·북한 간 대립구조가 있으며, 이에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주변 4강의 국가이익이 연계되어 있음

❍ 이들 요인 중에서 최근 북한 요인이 가장 큰 위기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북한 핵문제와 북한의 대남도발 등으로 한반도의 분단 비용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의 안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북한 관련 위기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 통일을 상정하고, 이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을 논하고자 함

Ⅱ. 북핵문제와 한반도 분단 비용

❍ 북한 관련 위기는 크게 ① 북한 핵문제와 ② 북한에 의한 대남 도발

등 한반도 분단 비용을 들 수 있음

**<북한 핵문제>**

❍ 북한은 2012년 2월 12일 제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된 전쟁 억제력을 확보했다”고 주장

❍ 북한의 핵능력을 종합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의 지휘통제, 관리, 안전 측면에서는 불안한 수준으로 평가

❍ 이와 같은 북한의 핵(무기) 문제는 한국에게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지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 중국의 ‘핵심이익’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요인으로도 작용 예상

- 첫째,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다면 동북아 국가들의 핵 도미노 현상 예상

- 둘째, 북핵에 대하여 불안함을 느낀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동맹세력과의 결집이 강화될 전망

- 셋째, 중국 동북지방이 직접적으로 북핵 위협에 노출되어 지역 불안이 가중

- 넷째, 북핵과 관련한 중국 내부의 여론 분열이 예상

**<한반도 분단 비용>**

❍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한 북한과의 분단이 고착화 될 경우 한국은 과도한 분단비용 지출 예상

- 첫째, 안보적 불안과 남북한의 군사력 건설의 경쟁은 상당한 재원 지출을 요구. 특히, 남북한 모두 적정 수준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과도한 방위비를 지출하면서 사회적 손실을 부담

- 둘째, 한반도는 미중 간 세력경쟁의 각축장, 일중 간 지역안보구도의 갈등 사이에서 강대국의 희생물로 전락할 우려

- 셋째, 영토와 인구규모가 제약된 한국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및 경제인구 의 감소로 한국 경제위기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 예상

❍ 반면, 한반도 통일시 지역안전 기여 및 안보비용 감축 효과 기대

• 지역 안전기여 측면에서 북한의 비핵화 및 WMD 제거로 지역내 안보 불안 요인을 제거 할 수 있으며,

• 한국이 미·중·일·러를 연결하는 다자 안보체제를 추동 가능

• 한반도의 안보비용 절감으로 지역 내 군비 감축도 가능할 전망

Ⅲ. 한반도 통일과 한중 협력 방향

❍ 북한 핵 문제와 북한의 도발 등 북한으로부터 발생하는 위기를 관리하는 최선의 방향은 ‘한반도 통일’임

❍ 한반도 통일은 한국에게도 경제적, 안보적으로 지대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중국의 국익에도 긍정적 효과를 유발 예상

❍ 중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의 ‘통일 편익’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경제적으로 한반도 북부와 중국의 동북지역이 연계되어 중국 동북 3성의 획기적인 발전을 추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통일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연계되는 두만강 지역의 물류 혁신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서해와 동해를 중심으로 거대한 경제권이 조성되며 인구 6억 4천만, GDP 7조 달러의 동북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

- 둘째, 지리적인 면에서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의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여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뿐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역 해상교통로를 창출하여 한중일의 교역 및 교류의 허브 조성 예상

- 셋째,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면서 역내 갈등 구조는 완화될 것이며 통일 한국의 군비 축소는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연쇄적인 군비 축소로 확장될 수도 있음. 전반적으로 다자안보 체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며 EU의 사례와 같이 안보비용은 절감될 전망

❍ 통일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추구하되, 급속한 통일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며, 분야별로 점진적 통일과 급속한 통일이 혼재한 상황도 상정해야 할 것임

❍ 다양한 통일방식을 고려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중간에 협력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인식의 측면에서 북한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 형성 필요

북한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대북지원 소요는

나날이 증가할 추세이며, 정치는 현대사회의 유례 없는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고 핵 (물질)이 테러세력 등에 유출 시

에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음

- 둘째,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경의 안정화를 위해 협력

점진적인 통일이 진행될 경우 국경 인근의 노동인력이 이동할 것이며 한중은 이러한 노동력 흐름을 적절하게 지원해야 하며, 급변적인 통일이 진행될 경우는 탈북난민을 관리하고 수용 시설을 운용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 됨. 결과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경선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함

- 셋째, 북한의 내부적 안정을 위해 협력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는 시급히 제거해야 하며, 핵물질과 무기가 혼란 속

에서 유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협력을 통한 통제 및 제

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북한의 체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안정을 확

보해야 하며, 우발적 전쟁, 내전, 대량 학살 등을 방지해야 함. 궁극적으로 북한의

안정이 한국과 중국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함

- 넷째, 남북한 간의 정치적 통합을 위해 협력

한반도의 점진적인 통일이 완성될 경우, 1국가 1제도의 완전한 통합이 이뤄져야 하

며, 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통합이 완전한 안정을 가져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원

해야하며,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협력 및 지원하는 통합으로

인식하고 협력해야 함.

- 다섯째, 통일한국의 국제적 통합을 위해 협력

기존의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지역 5자 협력기구’로 전환하고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 내 새로운 형태의 다자안보기구를 구상하고 정착함에 있어 한국과

중국은 협력해야 함

Ⅳ. 결론

❍ 한국의 안보구도 상 여러 가지의 위기요인이 있지만 북한의 핵문제와 북한의 도발 등 분단비용이 가장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북한의 핵문제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게는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인이기도 함

❍ ‘핵 보유국 북한’과의 분단된 한반도는 안보, 정치, 경제적으로 막대한 분단 비용을 지부할 뿐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성장에도 부담이 될 것임

❍ 따라서 북한 위기관리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이 최상의 대안이므로 한국과 중국은 ‘통일 편익’을 고려하여, ① 북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공유 ② 통일과정에서의 국경 안정 ③ WMD 관리 등 북한 내부의 안정 ④ 통일한국의 정치적 통합 ⑤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함